

II. 1999년의 주요 환경행정 계획

1. 맑은물 공급

■ 4대강별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수립·추진

○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추진

- 법률정비
- “물이용부담금” 징수 (요율 : 톤당 50원~100원)
- “수변구역” 및 “보안림” 지정 추진 ('99년 8월까지 지정)
- “오염총량관리제”는 희망 지자체부터 추진 (이천시 희망)

○ 낙동강수계 특별종합대책 수립

- 공단밀집 관계로 먹는 물 문제의 해결에 집중

○ 금강·영산강수계 특별종합대책 수립

- 금강·영산강수계 환경기초조사('99년 8월 완료 예정) 및 수질예측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종합대책을 2000년 상반기까지 수립
- 대청호·주암호 광역상수원 수질보전대책은 조기 수립('99. 12)

○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립

■ 수돗물 국민불소 해신

○ 정수장 수질관리 강화

- 정수장 관리 실명제(관리자, 수질현황 등 공개)와 정수장별 등급 제도 도입
- 기준초과 정수장에 대한 정밀점검실시 및 기술지원 강화

○ 수질검사 강화 및 검사결과 공표방법 개선

- “급수과정 모니터링제” 실시
- 수돗물 검사결과를 소지역 단위로 공표 (PC 통신, 인터넷 활용)

○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

- 노후수도관 2,585km 개량 및 원수수질이 나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('99년 6개소 완공, 2000년 이후 5개소 추가완공)
-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

■ 수질오염원 관리강화

○ 오염행위 상시감시체제 구축

- 임시조직인 4대강 환경감시대를 상설기구화
- 소하천별 상시수질측정망 설치, 수상감시반 운영, 오염업소 24시간 감시 등 과학적인 “현장오염 감시체제” 구축 ('99.6 완료)

2. 맑고 깨끗한 공기 확보

■ 대도시 공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

○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

-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도시의 노후시내버스(약5천대), 2007년까지 대도시의 나머지 시내버스 전량(약1만5천대)을 천연가스버스로 대체
- '99년에는 천연가스버스 시범운영 확대
-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지원방안 마련

○ 매립지 온실가스 대책

- 매립지 온실가스 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
- 대규모 모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,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
- 자발적 감축유도 및 청정연료 사용 확대
 -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“기업-정부간 자발적 협약제” 도입·시행 - 참여업체에 환경규제 완화
 -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지역 확대 (29개→35개시)

■ 근원적인 대기개선대책 수립·추진

- 2000년대 중·장기 대기보전종합대책 추진 (2000.6 완료)
- 오염이 심한 공단지역 등 특별관리
 - 오존 및 질소산화물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부산·대구권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
 - 시화·인천지역의 악취오염 및 울산·반월지역의 중금속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시설개선 추진
 - 각종 개발계획으로 대기질 악화가 예상되는 광양만권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, 관리 강화

3. 쾌적하고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

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근절

- 폐기물처리 인증제 도입
 - 폐기물처리 전과정에 대한 적법처리 입증 의무 부여 (지정폐기물, 건설폐기물, 장거리이동폐기물 대상으로 시행)
 - 적법처리 미립증 또는 허위입증시 “3진아웃(허가취소)” 제도 시행
-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 도입
 - 방치폐기물 발생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제조합 가입, 처리보증보험 가입, 이행보증금 사전예치 중 택일토록 의무화
 -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'99.9까지 설립 추진
-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
 - 수도권지역 지정폐기물처리장(시화·화성) 조속 설치
 - 소형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및 방지시설 설치가 곤란한 소형소각시설(25kg/h) 설치금지

-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
 - 적출물 등을 의료법 관리기준에서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변경
 - 전과정 처리입증제 적용 및 엄격한 시설 관리기준 설정

■ 자연자산의 보전

- 국립공원 관리 강화
 - 등산로, 계곡, 식물군락지 등을 대상으로 자연휴식년제 확대 실시
- 그린벨트의 환경친화적 구역 조정
 - 과학적인 환경평가결과 반영
 -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저밀도 개발 유도
- 야생동·식물의 밀렵·밀거래 방지
 - 경찰·검찰·산림청 등과 합동단속 강화
 - 민간자율감시체계 구성·운영(동물구조협회, 수렵협회 등)

우석훈 (현대환경연구원 수석연구원)